

# 경찰수사론

10주차

이정덕 교수

## IV. 강도사건 수사

- 강도죄는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1. 유형 및 특징

유형	①단순강도죄(형법 제333조) ②준강도죄(제335조) ③인질강도죄(제336조) ④특수강도죄(제334조) ⑤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 ⑥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⑦강도강간죄(제339조) ⑧해상강도죄(제340조) ⑨상습강도죄(제341조)
특징	- 강도사건은 수법범죄에 해당한다. - 강도범죄는 재물을 탈취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다. - 절도에 비하여 발생빈도는 낮으나 강도실행 중 범죄발각 등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절도죄보다도 훨씬 크다.

## 2. 수법

침입강도	- 주거.점포.은행.차량.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
노상강도	- 어두운 골목길에서 행인을 흥기로 폭행.협박하여 소지품을 강취하는 방법
인질강도	- 사람을 인질로 인치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
준강도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 3. 수사요령

초동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긴급배치 실시로 범인검거에 주력하여 피해확산 방지</li> <li>- 현장주변자들에 대해서도 사진촬영 및 검문검색을 하여 반드시 보고</li> <li>- 옥내 강도, 옥외 강도의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증거수집 노력</li> </ul>
피해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피해품(장물)의 품목.종류.수량.가액 조사</li> <li>- 범행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당시 경위 조사</li> <li>- 범인의 인상착의 확인</li> </ul>
대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대질조사를 실시한다.</li> <li>- 피의자가 대질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목격자, 관련 근거 등으로 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li> </ul>
흉기 등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는 범행 공용물이 현장부근에 버려졌는지 확인하여 압수</li> </ul>
장물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물은 재물범죄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장물유입경로의 추적은 범인특정과 체포의 지름길</li> <li>- 피해품을 확정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 후 장물수배, 장물수사를 실시</li> </ul>
수법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수법의 범죄자를 발견</li> <li>- 최근 발생한 사건 중 유사 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li> </ul>
여죄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통보표를 검색하여 용의자의 수법과 유사여부를 확인한다.</li> <li>- 용의자의 동의를 구하여 구강상피세포 등 DNA시료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li> </ul>
현장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요원 도착시간 확인, 피해자 구호, 먼저 도착한 외근간부에 의한 출입금지구역 설정</li> <li>- 추가 수배에 필요한 사항의 청취보고, 부근의 수색에 의한 범인체포, 도주범인의 추적</li> <li>- 목격자 참고인의 파악, 현장중심 지연수사, 현장보존 및 요원의 지정 등</li> </ul>

## 4. 강도유형별 중점 수사

인질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li> <li>- 당직 강력(폭력)팀은 즉시 지방청 형사당직실로 발생보고</li> <li>- 지방청 상황실에서는 각서에 인질강도사건 상황을 전파</li> <li>- 협박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통화를 한다.</li> </ul>
택시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접수시 즉시 긴급배치하고 택시를 강취한 경우 택시를 수배</li> <li>- 수개의 경찰서 관할 지역이 포함되므로 승차지점은 물론 범행지점, 차량발견지점을 포함하여 공조수사를 실시</li> <li>- 범행지점, 하차지점, 차량발견지점의 지리감이 있는 자를 상대로 수사</li> <li>- 도난 택시 발견 경찰서는 즉시 해당관서에 통보하고 현장보존에 유의</li> <li>- 평소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와 협조체제 유지가 중요</li> </ul>
취객상대 강도 (퍽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li> <li>- 범죄발생시간대인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주변 통행자나 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한다.</li> <li>- 범인이 강취한 피해품을 역추적하여 수표나 카드이용업소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한다.</li> <li>- 검거되더라도 현장부근에서 습득하였다고 변소하므로 특히 증거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li> </ul>
총기사용 인질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의 규모, 양상 도주방향 등을 감안한 광역배치 실시</li> <li>- 범인이 도주, 잠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경계배치</li> <li>- 넓은 지역에 소수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도주 예상 길목에 최소한 2명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li> <li>- 경계선을 설정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포위경계체제를 취하고, 주위교통을 차단</li> </ul>

## V.성폭력사건 수사

### 1. 성범죄의 개념

- 종전의 성기 중심적, 물리적 강제행위에 초점을 둔 범죄개념에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범죄 개념으로 변화됨
- 강간,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 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이 성범죄에 해당
- 개정 후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다루고 있다.(개정 전 형법 : 정조에 대한 죄)

### 2. 강간죄

의의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폭행.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면제를 마시게 하여 잠을 재운 후 간음한 경우도 강간죄가 성립함.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강간죄만 성립하고 폭행, 협박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감금을 해서 강간한 경우는 감금죄와 강간죄가 모두 성립한다.	
객체	사람(남자 포함)	
기수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되고 삽입시에 기수가 된다.	
소추조건	과거 친고죄였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	
피해자별 적용법률	만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연 19세 미만)
	연 19세 이상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 ◇ 개정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되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함.

#### ◇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2항).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함(제35조의3 신설).

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0조제2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성인지 감수성

**요약**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국어 표기	性認知 感受性(한자)
	gender sensitivity(영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말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3. 성범죄의 특성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발생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li> <li>- 입증 및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자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li> <li>- 상당수의 사건이 사후합의가 이루어지므로 조사관의 의지가 박약하다.</li> </ul>
피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중 피해(①범죄의 피해자 ②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 ③사회의 피해자)</li> <li>- 신고기피 및 증거제출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유교적 사회분위기와 수사시 경찰관의 태도</li> <li>②부끄러운 일을 타인에게 알리게 된다는 수치심</li> <li>③피해자에 책임을 돌리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li> <li>④면식있는 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원인</li> </ul> </li> </ul>
가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때에는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한다.</li> <li>- 가해자가 조사 전에 답변 자료 준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많다.</li> <li>*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항의한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li> </ul>
입증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증거가 소멸하여 피의자의 자백이나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li> <li>- 피의자가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묵비권 행사시에는 범죄사실 증명이 곤란</li> </ul>

## 성폭력 피해자 상담 기법 중 선택이론(현실요법)

- ①바람 탐색하기 :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
- ②행동 탐색하기 : 피해자가 지금까지 해 온 행동패턴을 탐색
- ③바람,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 : 피해자의 행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함
- ④계획수립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4.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 및 방법

## (1)초동수사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곧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테니 안심하세요.</li> <li>- 가해자는 연령, 키, 옷색깔, 머리모양이 어떻게 되나요?</li> <li>- 속옷 등 옷을 갈아입지 마시고, 현장을 청소하지 마세요.</li> </ul>
현장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장구(카메라, 성폭력 응급키트 등)를 휴대하고 즉시 출동, 경찰서 과학수사팀 출동을 요청</li> <li>- 전문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성폭력 NGO 연락처 등을 고지하고 피해자 안내서를 배부함.</li> <li>-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피해조서를 작성치 않도록 하고, 여경 팀장 또는 소장이 성폭행여부를 간략히 확인 후 본서에 인계하도록 한다.</li> </ul>
피해자 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도착 경찰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도록 하는 것</li> <li>-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의 즉각적인 치료는 물론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li> </ul>
진단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의사의 진단서는 사건기록에 첨부</li> <li>- 의사의 진단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요소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의 신체적인 외상 ㉡강제적인 성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li> <li>㉢기수.미수를 가리기 위한 성기 삽입의 여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등</li> </ul> </li> </ul>
피해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li> <li>- 피해자가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우이거나 병원치료 중이라면 간단하고 중심적인 부분, 즉 수배를 위한 피의자의 인상착의 정도로 그쳐야 한다.</li> <li>- 경찰관서장은 성폭력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li> <li>-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li> </ul>

## (2) 증거채취

상해확인	- 진단서 발급, 사진촬영 또는 상해부위도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
정액채취	- 24시간 이내 폭행 당할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마, 바지, 외음부 등 정밀검색으로 정액을 채취 - 성폭행 후 휴지 등 뒤처리한 물건 등에서 정액을 채취
음모수거	- 피해자의 성기부위의 음모를 가는 빗으로 빗질하여 떨어져 나오는 음모를 수거 (반드시 본인 등이 하게 한다) - 범행현장에서 모발, 음모, 피의자의 단추 등을 수거

## (3) 범인의 체포 및 조사

범인의 체포	-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된 경우에는 범인의 신체에 긁히거나 물리거나 멍든 자국 등이 없는지 -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 상처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유전자 감식을 위하여 용의자의 혈액, 모발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 - 체포시에는 관련된 다른 증거들(흉기 등)을 수색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가해자 조사	- 가해자에게 자신감있는 토대를 견지하되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한다. - 최초 조사시 강간 여부 등 범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추궁보다는 주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질문방법은 초기에 단답형의 질문사용 및 가해자가 서술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후반부에 세부적인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간 순으로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죄현장으로의 이동경위, 경로, 범죄 후의 행동 등 포괄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 5.성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피해여성 심리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을 청취할 때에도 은밀히 하고, 과격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li> <li>-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범죄수사규칙)</li> <li>- 수치심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술을 맹신하여서는 안된다.</li> <li>- 현장검증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를 대동하지 말아야 한다.</li> <li>-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li> </ul>
최대한 물증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사실이 뚜렷한 경우 → 범인이 불명하고(불량배에 의한 강간)</li> <li>- 범인이 뚜렷한 경우 → 강간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연인이나 친구에 의한 강간)</li> </ul>
화간여부 신중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장소가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인 경우 화간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li> <li>- 피해자와의 면식의 정도, 범행현장 상황,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반항흔적, 범행일과 고소일과의 간격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li> </ul>
피해자신원 누설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주소.성명.직업.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언론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li> </ul>
대질조사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li> <li>- 1차 피해조서, 2차 피의자신문조서, 3차 피해조서 방식으로 대질조사에 갈음한다.</li> <li>- 대질조사시에는 화상대질 조사실 등을 활용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li> <li>- 조사 전.후 시차별 귀가토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li> <li>- 수사진행 도중이나 귀가 중 가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우 관련사건으로 병합처리함</li> </ul>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모두 12차례 발의

의안 번호	9075
----------	------

제안연월일 : 2021. 3.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36	정춘숙의원	2020. 6. 1.	· 제38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0. 7. 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 · 제3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0. 8. 25.)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 회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안	50	남인순의원	2020. 6. 1.	· 제38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0. 7. 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 · 제3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0. 8. 25.)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 회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 률안	1415	김영식의원	2020. 7. 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 9.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안	1738	임호선의원	2020. 7. 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 9. 21.)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안	1934	노웅래의원	2020. 7. 1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 9. 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안	3278	황운하의원	2020. 8. 2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 9. 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안	4200	서범수의원	2020. 9. 2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 11. 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안	6860	박주민의원	2020. 12. 2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1. 2. 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안	7067	정부안	2020. 12. 3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1. 2. 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안	8321	장혜영의원	2021. 2. 2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1. 3. 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80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78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109075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74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70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9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8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2109067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6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5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4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2109063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2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1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60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3-24

의안원문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3. 15.)를 거쳐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3. 22.)에서는 위 10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23.)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함.
-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 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안 제3조 및 제4조 등)

-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3)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 1)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2)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7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마.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톱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6km 스토킹男 돌려보낸 경찰, 뒤늦게 “입건해 조사”

입력 : 2021-04-01 15:34 / 수정 : 2021-04-01 15:46

고속도로 스토킹 당한 차주입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3]

글쓴이	abcd1234
가입일	2015.08.28
활동지수	마력 2.597
작성글	게시글 4   댓글 65



B씨가 올린 글과 블랙박스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수십km 뒤따라간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으로 A씨(39)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 B씨의 차량을 46km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과거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존 형사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병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파출소로 몸을 피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A씨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B씨의 블랙박스에 찍힌 정황상 A씨가 고의로 뒤따라 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단순히 쫓아오거나 바라본 것 만으로 적용할 죄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가는 길이 겹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 실제 주소지도 해당 지역이어서 B씨를 뒤쫓아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의 이같은 설명에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신변 노출 등을 우려하다 일주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따라오는 행위로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차로 위협한 게 아니라면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대체 누가 사는 동네도 다른데 (일부러) 길을 돌고 돌았던 내 동선과 똑같이 파출소까지 따라오고 파출소 앞에서 창문을 내리고 뺨히 쳐다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경찰의 말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법을 A씨에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 6. 아동성폭력범죄 수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근친강간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은폐되는 경향이 높다.</li> <li>-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며 실제 발생률 파악이 곤란함.</li> <li>-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계획적인 경향이 강하다.</li> <li>- 접근단계 → 성폭력단계 → 비밀단계 → 노출단계 → 억압단계 등 계획적.단계적 발생 및 은폐과정</li> </ul>
피해아동 조사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간사건이 보고된 후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면담해야 한다.</li> <li>- 여성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li> <li>- 조사 전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동행토록 한다.</li> <li>- 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아동의 부모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li> <li>- 조사전 진술녹화제 취지를 설명하고 진술녹화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li> <li>- 이미 소아정신과 의사나 아동심리 전문가로부터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경찰관 조사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폭력 아동심리 전문가 등이 경찰관 대신 간접조사를 할 수 있다.</li> <li>- 경찰관 조사시에는 가능한 한 아동전문가를 참여시킨다.</li> <li>-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찰관은 반드시 사복을 착용한다.</li> <li>- 피해사실을 중점으로 면담하지 말고 아동의 취미나 애완동물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li> <li>- 아동조사시 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아동에게 진술을 하는 경우 아동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에 손상이 되므로 조사시작 전에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아동조사시 참관만하도록 조치.</li> <li>- 가급적 부모는 피해아동이 성폭행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는다.</li> </ul>
진술녹화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연 19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 장애 성폭력 피해자(의무적 녹화 실시)</li> <li>*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촬영 불가</li> </ul>

VI. 화재사건 수사

1. 의의 및 특징

(1)의의 : 방화와 실화의 죄는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거나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이다.

(2)특징

- ①현장증거의 소실 : 현장자료의 소실로 범죄단서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으로 연소상황, 불길의 색깔, 냄새, 목격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전문적 지식의 요구 : 초동조치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③동기범죄 : 방화의 경우 동기가 존재하므로 동기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

(3)방화동기수사 : 경제적이익, 범죄은폐, 원한.복수.미움, 장난, 사회불만, 선동목적, 범죄의 수단, 방화병

(4)방화방법의 수사

방화방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화방법은 동기와 매우 관련이 깊고 동기 못지 않게 중요하다.</li><li>- 수사관이 추정 또는 확정된 방화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보아 발화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감정, 실증한다.</li><li>- 원한.치정.복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에 있어서는 위험이나 발각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단순하다.</li><li>- 보험금이나 죄증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에 있어서는 발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교묘한 것이 보통이다.</li></ul>
방화재료 수집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화점 및 그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서 방화에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물건은 빠짐없이 수집, 보존</li><li>- 현장에 산재한 신문지, 석유, 휘발성 유류의 보관용기 등의 유무와 냄새 등을 조사하여 이를 최대한 수집.보존하여야 한다.</li></ul>

## 2. 화인(火印)

의의	- 어떤 화원이 어떤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는가를 의미 - 화인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화재예방				
화인의 3요소	화원	-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불씨)		냉각소화법 (물이나 CO <sub>2</sub> 소화기 사용)	
		유염화원	- 불꽃이 나는 물질(종이 등)		
		무염화원	- 불꽃이 나지 않는 물질(담배 등), 훈소(燻燒)		
		잠재성화원	-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 (전기, 화공약품, 라지에터)		
	가연물	- 산화되기 쉬운 물질		제거소화법 (연소확대시 중간 가연물 파괴, 산불시 맞불)	
		기체	- 반드시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		
		액체	- 휘발유, 신나 등(증발연소) - 방화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고체	- 왁스, 숯, 목탄(표면연소), 나프탈린(증발), 석탄(분해)		
공기	- 산화공급원으로서 공기 중 특히 산소를 의미 - 폭발성 물질은 따로 산소공급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질식소화법 (포말소화기, 모래 등)		
특성	- 화원, 가연물, 공기 중 한가지만 부족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 화원과 가연물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착화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난로가 불연재인 콘크리트바닥에 쓰러졌을 때 다른 가연물이 주위에 없는 한 화재로 발전되지 않는다. 이처럼 화원과 가연물 사이에는 부주의한 경과, 즉 착화과정(책임소재)이 개입되어야 함.				

## 3. 화재사건 초동수사

평소 준비	- 수사기자재(안전모, 손등, 로프, 발굴용구 등)의 준비 및 정비 철저
수사간부의 신속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간부는 신속하게 현장을 답사하여 사안의 성질을 확인</li> <li>- 방화 등 중요사건이라고 판단된 경우 긴급배치 등의 초동조치를 실시</li> <li>- 대규모 화재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치안상황실을 경유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광범위한 교통차단, 부근주민의 대피유도 등의 조치</li> </ul>
목격자 발견자 확보	- 화재현장은 증거물이 부족하므로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한 가옥의 거주자, 최초발견자, 목격자를 확보하여 목격상황, 수상한 자의 목격여부 등 수사자료를 수집
현장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광범위하게 경계선을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한다.</li> <li>- 전기.가스 등의 위험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li> <li>- 현장에 있는 증거자료는 주무과원이 입장할 때까지 수집.채취하지 않는다.</li> </ul>
전문가의 입장요청	- 방화. 빌딩 등 대규모 화재, 병원.학교 등 공공시설 화재, 전기.약품.자연발화성 물질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화재의 경우 전문가의 입장을 요청한다.
현장관찰과 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관찰은 선입관을 배제하고 최초발견자 및 불이 난 가옥의 소유자의 목격상황, 전기관계, 자연발화물의 존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등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li> <li>- 현장부근의 족흔적, 유류품, 방화매개물 등에 대해서 채증활동을 실시</li> <li>- 처음 불이 난 장소의 발화물 또는 방화매개물이라고 인정되는 물건 등을 채취하여 다른 증거들과 함께 감정을 의뢰</li> <li>- 소사체를 발견한 경우 발견자, 일시장소, 상태 등을 기록하고 사진촬영 후 시체처리반에 인계</li> <li>- 소사체는 외표검사만으로는 자.타살 및 사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검을 통해 사인 확인</li> </ul>



## 4. 화재현장의 검증

의의	-. 화재현장의 검증은 그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그 원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 -. 화재현장은 사건형태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검증을 할 때에는 그 화재현장의 개요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하며 따라서 초동수사단계에서 파악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원칙	① 외부에서 내부로 ② 전체에서 부분으로 ③ 좌(우)에서 우(좌)로 ④ 위에서 아래로 ⑤ 소훼상황의 약소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실시	
기재사항	① 현장의 방위, 위치, 주위의 상황                      ② 풍향, 풍속 등 기상상황 ③ 발화, 출화 당시의 상태 및 시각                      ④ 연소상황 ⑤ 피해상황    ⑥ 증거물    ⑦ 피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인적 사항	
검증순서	① 현장부근의 관찰→②소실가옥의 관찰→③화원가옥의 확인→④발화부.출화부의 확인→ ⑤발화부 관찰(출화원인의 확인)→⑥발화원인물의 조사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